

정책기관

팅분야와 조액·송액·탈포·세정 등 주변기술)을 하고 있는 金子所長을 초청 코팅 및 주변기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지난 해 7월 27일 일본의 “技術情報協會”에서 주최했던 “Die Coating에 있어서의 코팅 최적 설계·트러블 대책” 중 “Die Coating에서 고려하여야 할 트러블·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책” 및 올해 4월 16일(Osaka), 4월 22일(Tokyo) 加工技術研究會 주최로 개최된 “코팅액의 조정·송액기술의 기본 및 현장의 과제”로 강연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정밀코팅 기술을 전자재료 및 광학필름 분야에 응용전개하는 경우, 기술적인 포인트나 개발·실용화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코팅줄, Seeds, 거품, 오염, 막두께 분포 등)과 이들의 대응책에 대해 현장에서의 경험을 기초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는 Die Coating 기술의 실용화시의 과제 등에 대해서도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참가비는 1인당 30만원이며 접수마감은 이달 13일까지이다. 문의는 한국포장기술연구소(전화 02)2026-8166)로 하면 된다.

환경부

지원역량 결집위한 공동추진단 출범 지경부, 기청, REACH 대응 공조키로

환경부(장관 이만희)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은 이번 달 REACH 사전등록 개시에 앞서 기업의 원활한 사전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 추진단

을 출범하고, 첫 행사로 「REACH 주간」 행사를 공동 개최(5.27~6.2, 서울/지방/독일)하는 한편, REACH 대상 기업의 대응현황을 정밀 점검하는 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REACH(Regulation on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EU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산업계의 위해성 입증 책임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화학물질(혼합물내 물질, 완제품내 물질 포함)을 제조하여 EU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사전등록·등록·신고·허가 등의 REACH 규제 대응이 필수로 자리잡게 된다.

그간 REACH 관련 교육·홍보 기능이 부처별로 분산 추진됨에 따라 중복성 및 업계의 혼란 등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으며, 부처간 정책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도 미흡하였기에, 민·관의 REACH 대응역량을 결집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동 추진단은 환경부와 지식경제부의 담당실장을 공동 추진단장으로 하여 행사기획팀과 기업점검·지원팀의 2개 실무 작업팀으로 구성되며, 행사기획팀은 3개 부·청 담당과를 중심으로 『REACH 주간』 행사 등 향후 REACH 관련 교육·홍보 행사의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조정하고, 기업점검·지원팀은 REACH 대응 전문기관과 지방조직을 중심으로 등록 대상 기업의 대응현황을 정밀 점검하게 된다.

정책공조의 첫 단계로서 그동안 산발적, 중복적이던 REACH 관련 유사 행사가 통합돼 단일 행사로서 「REACH 주간」 행사가 개최되며,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이 사전등록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세미나·설명회를 통해 전략적 REACH 등록방안을 제시하고 국내·외 전문기관과 1:1 사전등록 컨설팅을 주선하는 한편, 독일 현지 설명회를 비롯하여, 사전등록 누락방지를 위한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국내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 추진단에서는 지방중기청, 지방환경청 등의 지방조직 및 REACH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기업의 사전등록 대응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지원키로 하고, 일차적으로, 부처별/기관별로 별도 구축·운영 중이던 REACH 대상 기업 D/B를 통합, 단일화하는 작업부터 착수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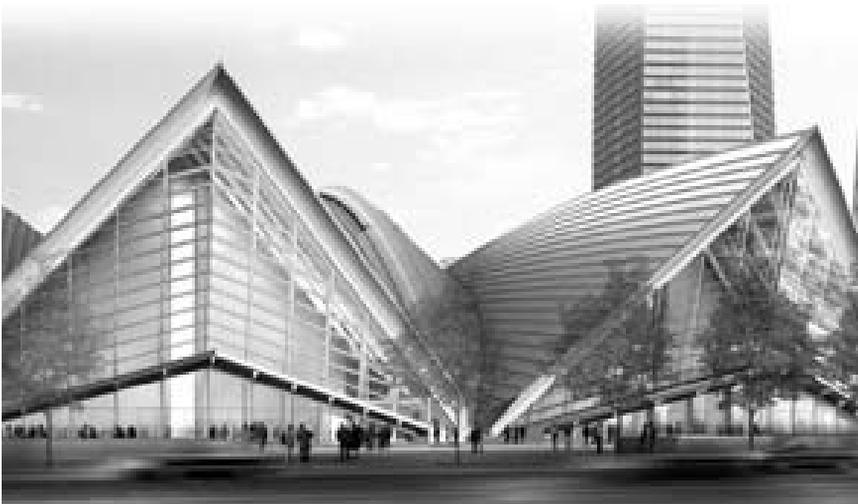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은 공동 추진단을 통해 관계 부처간 정책 공조를 실천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업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적정 비용으로

적시에 사전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시
인천국제물류전 참가유치 박차
기성, REA

인천시(시장 정무부)가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08 인천국제물류산업전시회(InterLOGIS 2008)의 조직위원회 구성으로 참가업체 유치 및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인천시에 따르면 조직위원회는 2008 인천국제물류산업전시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무부 위원장을 중심으로 24명의 물류관련 기관·업계·단체 대표로 구성하고 23일 위촉장 전달과 함께 사업계획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적극 협조



◀인천국제물류전시회가 열리는 송도컨벤시아

정책기관

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다양한 참가비 할인 적용으로 세계적인 종합물류업체의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하고 국제적인 전시회로 발전시키기 위해 해외 바이어들에게는 항공료 일부와 호텔 숙박비를 보조할 방침이다.

2008 인천국제물류산업전시회는 송도컨벤시아 개장을 기념하고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및 홍보지원으로 명품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부각하게 된다.

전시장 규모로는 3백70개의 부스가 마련되며 국내·외 1백35개 관련업체가 참가하고 화주, 물류산업 종사자 등 3만명 이상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 IT, 소프트웨어, 정보화시스템 ▲ 하역·운송·수송 장비, 산업용 차량 ▲ 포장, 보관, 창고시스템 ▲ 물류 서비스 분야 ▲ 항만·공항운송 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물류관련 품목들이 선보인다.

이와 함께 부대행사로 물류 취업 박람회, 해외 유명 물류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 다양한 컨퍼런스가 개최되며, 자세한 안내는 2008 인천국제물류산업전시회 인터넷 홈페이지(www.InterLOGIS.kr)를 참조하면 된다.

환경부

8월 4일부터 올바로시스템 사용 의무화

유해폐기물 등 인터넷 실시간 관리

오는 8월부터는 모든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사업장으로 올바로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폐기물 인계·인수시 기존에 종이전표로 관리

하던 것을 폐기물소량배출사업장까지 전자인계서로 작성·관리해야 함으로 올바로시스템의 사용 대상사업장 수가 현재 4만5천여 개소에서 23만 여개소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늘어나는 다양한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ARS로 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뿐만 아니라 대형사업장의 자체시스템과 Allbaro 시스템을 연계했고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과 Allbaro 시스템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종이인계서에서 전자인계서로 개선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할 때 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종이전표 발행비용·시간·인력 및 행정기관 업무처리비용 절감 등 국가 전체적으로 약 4천6백31억 원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2년부터 개발·운영돼 온 올바로시스템은 2007년 12월 말 현재 전체 유해폐기물의 80% 이상(2천1백82천 톤)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위해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의 경우 전산입력 없이 실시간으로 폐기물 인계·인수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을 이용하여 폐기물 관리의 선진화를 이뤘다.

아직까지 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은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www.allbaro.or.kr)를 접속해 가입절차를 거친

후 전자인계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무료이다.

환경부
호남권 리사이클링센터 준공
 전자업계와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

호남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전자제품을 효율적으로 회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호남권 전자제품 리사이클링센터”가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호남권 리사이클링센터는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 제주권에 이어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의 주도로 설치되는 폐가전제품 재활용시설로 호남권에서 발생하는 폐전자제품을 역회수 방식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게 된다.

리사이클링센터는 부지 2만2천㎡에 약 1백억 원을 투입해 건립되는 시설로서 호남권에서 발생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폐전자제품을 연간 24만대씩 회수하여 재활용하게 되고, 이를 통해 고철·구리·알루미늄·수지류 등 원료 소재를 연간 약 1만톤 이상 생산하게 된다.

센터는 자동으로 분해·분리 및 파쇄·선별하는 최첨단 시설과 냉매(CFC) 회수기, 방진시설 등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폐전자제품의 리사이클링 회수·재활용과정을 한 눈에 확인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홍보·교육관도 설치되어 지역의 재활용교육의 장으로서도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욱 환경부 차관은 호남권 리사이클링센터 준공이 호남 지역의 가전제품 재활용을 확대하고, 자원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초석이 되길 당부



▲ 환경부가 호남권에 준공한 리사이클링센터

정책기관

하며 이를 위해 전자업계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역주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
온실가스 라벨링 공청회 개최
 제품에 온실가스 배출정보 표시

환경부(장관 이만희)는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사회의 저탄소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품에 대한 탄소성적표지제도(온실가스 라벨링)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소성적표지는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인기관의 인증을 통해 제품에 표시하는 것으로 탄소성적표지를 인증받은 기업과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기회를 제공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는 기업들이 제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쉽고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지침과 소프트웨어를 금년 9월까지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산지침은 향후 국가간 상호인정을 고려하여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와 ISO 14064, 14040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개발할 계획이며, 향후 제품별 온실가스 인증 및 등록업무는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담당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저탄소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해당제품에 대한 최초 인증시에 표기한 온실가

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재인증시 정부가 제시한 최소감축목표를 달성할 경우, 저탄소 인증제품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향후 공공 및 민간구매에서 이들 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1회용 도시락 사용 금지 해제
 대신 생산자에 재활용 책임

1회용 종이컵과 종이봉투에 이어 합성수지로 만든 1회용 도시락 사용을 금지한 규제도 전면 해제된다.

환경부(장관 이만희)는 음식물을 담은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도시락 용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규정을 삭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관계자는 "도시락은 보온성이 필수적인데, 합성수지 도시락을 대체할 만큼 보온성을 갖춘 용기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다"며 "정책 기조가 폐기물을 매립하던 데서 자원화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있는 만큼 매립을 전제로 했던 1회용 도시락 규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회용 도시락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1회용 도시락을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합성수지 도시락은 매립시 잘 썩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이 금지돼 왔으나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

렵고 대체 용기 확보도 쉽지 않아 실제로는 대부분의 도시락 업체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를 이용하는 업체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으나 '일파라치' (1회용품+파파라치)만 늘고 사용량은 줄어들지 않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다.

앞서 환경부는 3월 1회용 컵에 50~1백원의 보증금을 받던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폐지했으며, 1회용 종이봉투 무상 제공 금지 제도도 폐지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번 달에 공포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무역장벽 대응 안전성 평가기술 논의
 나노 기술 안전성 확보

웰빙제품에서 스포츠용품, 전자산업 및 에너지 분야까지 나노관련 국내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신제품을 탄생시키고 있는 나노물질의 안전성 평가방법 및 규제동향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나노기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워크숍'을 지난 달 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워크숍은 나노물질을 대표하는 은나노(Nano Silver)와 탄소나노튜브(CNT, Carbon Nanotube)의 안전성 평가기술 확보를 통한 나노제품의 상용화 지원 및 수출에 대한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에서 나노기술을 응용한 제품의 국내외 산업화 동향과 은나노의 항균성 및 나노물질의 노출에 따른 인체와 생태영향 평가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또, 은나노의 독성평가방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와 나노화장품의 인체 안전성 등 국내 초청 연사의 발표로 진행됐다. 아울러 OECD와 ISO와 같은 국제적인 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나노물질의 안전성 관련 대응활동에 대한 동향발표로 국내외의 나노기술 안전성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향후 10년 이내에 급성장 할 탄소나노튜브 등 나노입자의 노출평가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론했으로써 나노물질의 노출저감을 통한 나노산업 종사자 및 연구자의 안전보건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기술표준원은 나노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의 안전지침 개발을 기획하고 있다.

아울러 OECD와 ISO/TC 229(나노기술) 국제기구의 나노물질의 안전성 관련 최신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OECD는 최근 나노물질의 건강, 환경 영향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대상 나노물질을 선정하고 향후 OECD 규제에 대한 근거가 되는 표준은 ISO에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나노기술의 안전성 평가 기술 및 표준개발, 규제동향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와 정보교류를 통해 나노제품 개발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나노물질의 유해성 저감을 위한 대응책 마련의 기반이 됐다"고 밝히면서 "나노분야 산업화 촉진 및 무역장벽 대응을 통해 나노제품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